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와 공동체 운동의 성과와 과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김 창 근
연세대학교

김창근(2016),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와 공동체 운동의 성과와 과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1), 37-72.

초 록 이 논문은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와 코윈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와 공동체위원회와 코윈 운동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비교·고찰한다. 이 글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유고슬라비아 운동에서 집단적 소유와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점들이었다. 2) 베네수엘라에서 제시되었던 대안적인 경제 모델들은 집단적 소유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의 수정이 불가피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3)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에서는 아직은 집단적 소유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핵심어 공동체위원회,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 통제, 대안적 경제 모델, 볼리바리안 혁명,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집단적 소유, 차베스, 코윈, 특권층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660).

I. 서론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사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작년 말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참패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인 ‘볼리바리안 혁명(Bolivarian Revolution)’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들이 모두 되돌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글은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온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 운동을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과 비교·연구함으로써 볼리바리안 혁명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 운동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 또는 노동자 통제 운동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유고슬라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코뮌과 공동체위원회(communal council) 건설 운동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운동에서 나타난 ‘집단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 문제와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 문제를 간략하게 다룬다.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 통제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 모델들의 발전이라는 더욱 커다란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3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집단적인 경제 모델들이 집단적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왔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4장은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의 핵심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노동자 통제 운동에 직면했던 문제점들과 과제를 다룬다. 뒤의 두 장에서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은 아직은 집단적 소유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이 노동자 통제 운동을 가로막은 핵심적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II.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자주관리에서 나타난 집단적 소유와 새로운 특권층 등장 문제

유고슬라비아에서 노동자 자주관리가 도입되게 된 것은 1948년 6월 당시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Josip Broz Tito)와 스탈린의 불화 이후 유고슬라비아가 코민포름(Cominform)에서 축출된 사건이었다. 이후에 유고슬라비아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이었던 소련의 국가사회주의 모델과 결별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의 이론가들은 소련식의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의 독점’을 낳았던 국가소유에서 찾았으며, 국가 소유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와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주관리(self-management)를, 정치적 영역에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Djokordjevic 1966, 61; Horvat 1969, 39).

그렇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모델은 집단적 소유의 문제와 새로운 권력층의 등장이라는 문제점들에 직면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아래에서는 집단적 소유의 문제와 새로운 권력층의 등장 문제를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 모델의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요약하겠다.¹⁾

1. 집단적 소유의 문제

유고슬라비아에서 기업의 ‘법적인 소유’는 여전히 국가에 있었지만, 사회적 소유는 ‘노동자 자신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의미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이론가들은 사회적 소유의 결과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이 직접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지배”되며 자주관리 기업의 생산 목표는 “이윤이나 자본축적이 아니라 인간 필요의 충족”, 즉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Horvat 1971, 92, 109; Supek 1975, 4-5).

실제로 유고슬라비아에서 1961년 이후에는 기업 내의 노동자평의회가 기업

1)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김창근(2007a; b)를 참조할 수 있다.

1974년에는 10% 이상이 되었으며, 서독을 비롯한 해외로의 이주 노동자들이 1964년 10만 명 정도에서 1962년 32만 명, 1968년 52만 명으로 증대하였다. 그러나 자주관리 기업의 노동자들은 실업 문제와 해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김창근 2007b, 184; Malacic 1979, 91-2).

넷째 집단적 소유 기업들이 기업 이윤의 많은 부분이 개인 소득으로 분배하게 되었지만 생산이 같은 속도로 증대되지 않았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52-64년 기간에 연평균 10.3%이었던 명목임금 상승률은 1965-73년에는 19.0%로 크게 증대하였고, 소비자물가는 1952-64년의 연평균 6.3%에서 1965-73년 15.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Gapinski 1993, 8-9).

다섯째 특정한 기업들의 높은 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력보다는 대부분 ‘모든 종류의 독점적 관행의 결과’일 뿐이었다. 또한 기업의 이윤에 의존하는 “특정한 직업의 임금 수준은 자격, 숙련과 책임감보다는 일하는 지역, 부문, 기업에 더 의존”하였다. 그 결과 집단적 소유는 기업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연대 의식도 약화시켰다(Flakierski 1989, 44, 80).

여섯째 낙후된 생산설비와 불리한 시장조건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 때문에 손실을 내는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적자가 자신들의 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 적자에 따른 자신들의 개인소득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는 흑자 기업의 이윤은 개인 소득으로 분배되어 ‘개인화’하는 반면, 적자 기업의 손실은 기업 부채의 누적으로 쌓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갚아야 되는 사회적 부채로 ‘사회화’되었다.²⁾

2. 노동자 자주관리의 실패와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 문제

유고슬라비아 이론가들은 소련식의 사회주의에서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전

2) 1964년 손실을 입으면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서 명목 개인 소득 증가율은 33%로 평균보다 13%만 낮았을 뿐이었다(Sirc 1979, 73).

달 장치'에 불과했으며 기업 내의 의사결정은 국가가 파견한 기업장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동자 자주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irc 1979, 1; Marković 2011, 106).

실제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이미 1950년대 초부터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에 주어졌다. 노동자평의회는 일상적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board of management)의 선출, 기업의 생산계획과 연간 재무보고서의 승인, 기업의 내규와 규제의 심의 등의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1965년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이 노동자평의회 대신에 노동자 총회에 주어지게 되었다(Marković 2011, 111-2; Seibel and Damachi 1982, 32, 87).

이와 같이 유고슬라비아에서 기업의 의사결정권이 법률적으로는 노동자들에 주어졌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자주관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소련식 모델의 국가 임명 관료 대신에 기업장과 전문가들이라는 새로운 특권층이 등장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첫째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노동자의 참여 부족은 집단적 소유 자체에 기인한 측면도 컸다. 노동자들의 개인 소득은 기업의 이윤에 크게 의존하였고, 기업의 이윤은 다시 노동자들의 노력보다는 투자자금 조달, 시장 수요와 가격, 투입물의 가격과 같이 '노동자평의회 통제 외부에 있는 요소들'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평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이슈는 노동자들에게 이차적이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Flakierski 1989, 50).

둘째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은 노동자들의 '전문지식'의 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197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81.6%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총회와 다른 모임에 항상 참여하지만, 47%만이 "자신들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자평의회 모임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미리 준비한 제안들은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과 정보’가 부족했던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Marković 2011, 122).³⁾

셋째 집단적 소유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전문 지식 부족 문제로 노동자들은 주로 소득 분배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에만 참여하게 되었다. 반면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은 경영진과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졌다. 결과는 “시장기제, 기업 간의 경쟁, 전문지식의 독점, 집단적 이기심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관료집단과 엘리트 집단”의 등장이었으며, 새로운 특권 집단이 “권력을 과점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계급 또는 계층화”하였다는 것이었다(Sirc 1979, 44; 강정구 1990, 114).

3. 코뮌과 노동자 자주관리

유고슬라비아에서 정치권력 분권화의 핵심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공화국과 자치주 정부와 코뮌으로 이양하는 것이었다. 코뮌은 1952년 ‘기본적인 정치적 단위’로 구성되기 시작하여 1956년까지 1,479개가 건설되었다. 1953년 헌법은 코뮌들에게 연방 또는 공화국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주었으며, 코뮌들은 자신의 지역 내의 기업에게 지방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재량권도 가지게 되었다(Seibel and Damachi 1982, 183; Flakierski 1989, 40).

특히 코뮌은 자신의 영역 안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일상적으로 노동자평의회를 감시하는 권한도 가졌다. 기업들은 연간 계획을 코뮌에 제출해서 승인

3) 노동자들은 종종 기업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들도 알지 못하였고 자주 관리가 부여했던 법률적인 권리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묻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높은 소득’, ‘좋은 노동 동료’, ‘능력 있는 감독관’, ‘재미있는 일’, ‘승진의 가능성’ 등의 순으로 답하였고, ‘자주관리 참여’는 항상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였다(Marković, 2011, 122; Sirc 1979, 43).

과 정책 조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기업이 투자 자금을 차입할 경우 코뮌은 은행에 대한 보증인으로 행동했다. 또한 1966년까지 기업의 기업장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Flakierski 1989, 89-90).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에서 분권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진 결과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간 발전기금’이라는 지역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기금을 배분하는 역할로 국한되었다. 결과는 유고슬라비아 경제가 공화국들과 자치주들의 경제로 분할되어 ‘느슨하게 연관된 8개의 경제 시스템’의 ‘연합’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지방 정부는 지역 밖으로 나가는 상품들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외지인들에게는 판매세를 징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지역의 정부나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의 기업들이 “자기 코뮌의 외부에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급적 코뮌 내에서 구입하도록 [자급자족] 정책을 강요”하여 ‘봉건적 사회주의’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간발전기금의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경쟁은 같은 공장을 공화국들과 자치주들에 8개씩 세우는 ‘정치적 공장들’의 건설로 귀결되었다(Nove 1991, 292; 이정우 1995, 296-7).

중앙정부 권력의 사실상의 무력화와 경제의 분할은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의 지속 또는 확대로 이어졌다. 1965에서 1975년 사이에 공화국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소련의 1.27-1.39배보다 높은 1.40-1.58배이었으며, 1975년 가장 발전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각각 1.5%와 1.4%이었던 실업률은 낙후한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제고비니아, 마케도니아와 코소보에서는 각각 15.1%, 12.9%, 20.8%와 27.9%이었다(Flakierski 1989, 42; Woodward 1995, 384).

코뮌은 집단적 소유와 특권층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뮌은 경제의 분할을 양산하여 또 하나의 분열인 지역적 또는 민족적 분열만을 만들어내었을 뿐이었다. 결국 베네수엘라에서의 분권화는 1990년대 초의 민족적인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III. 베네수엘라 대안적 경제 모델의 발전 과정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 통제 운동은 대안적 경제 모델이라는 더 커다란 청사진의 발전과정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오고 왔다. 이 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제시된 대안적 경제모델들을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 경험에서 확인한 집단적 소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모델

차베스의 정부와 볼리바리안 혁명의 초기의 대안적 경제 모델은 오스발도 순켈(Osvaldo Sunkel)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베네수엘라의 최초의 대안적 경제 모델은 차베스 정부의 ‘2001-2007년 경제적 · 사회적 발전계획(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for 2001-2007)’에서 처음 제시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모델이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소규모 가족기업과 자주관리 소기업들’로 구성되는 ‘연합기업들’을 의미했고, 차베스 정부는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미션 ‘부엘반 카라스(Vuelvan Caras, About Face)’을 통해 수많은 협동조합이 육성하였다. 처음에는 부엘반 카라스가 민중들이 “협동조합과 자주관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키고 “새로운 인간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Lebowitz 2008b, 44; Pineiro Hanecker 2009, 315).⁵⁾

그러나 차베스가 2007년 3월에 “협동조합은 집단적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모델은 사회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협동조합에

4) 순켈의 내생적 발전 전략은 수입대체 발전 전략과 수출지향적인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자원, 특히 유희하고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발전 전략이다. 더 자세한 것은 김창근(2010, 149-51)을 참조하라.

5) 차베스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과 협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창근(2010, 149-61)을 보라.

대한 차베스 정부의 지원은 전면 중단된다. 이유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주변 ‘공동체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유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다(Pineiro Hanecker 2009, 315-7).

물론 차베스 정부는 2001년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협동조합의 중요한 가치로 촉진하였고, 대부 조건으로 협동조합의 ‘수입의 10%’를 이웃 공동체에 기부하며 매주 2-4시간 동안 공동체와 지식을 공유하게 했다(Pineiro Hanecker 2009, 316-7).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협동조합 기업들은 사적인 집단적 소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협동조합들에서도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기업에서 나타난 ‘순수입을 극대화’하는 집단적 소유 기업의 문제점이 유사하게 반복된 것이다. 문제는 협동조합에 아무리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을 강제하더라도, 협동조합은 ‘집단적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사회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운동 진영은 집단적 소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문제점이 이후의 대안적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 파브리카 아덴트로 모델

볼리바르 혁명 세력은 2002-4년의 쿠데타, 자본파업과 차베스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등의 반정부세력과의 전면적 대결을 거치면서 급진화되었다. 그 결과 차베스는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게 되었는데,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소련에서 보았던 종류의 사회주의”일 수 없고, “기계나 또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모든 것에 더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이다(Lebewicz 2008a, 1).

그러나 차베스는 당시에 자신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2004년 11월 정부고위직 워크숍에 제출한

‘새로운 전략적 지도(New Strategic Map for the Country)’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모델을 넘어서” 것을 주장하지만, “사적 재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 모델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Nakatani and Herrera 2008, 25).

그리고 차베스는 2005년 1월과 4월 각각 인베팔(Invepal)과 인베발(Invebal)에서 공동경영 실험을 시작한 이후에,⁶⁾ 같은 해 8월에는 사적 기업들의 공동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리카 아덴트로(Fábrica Adentro, Inside the Factory)’를 출범시킨다. 파브리카 아덴트로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적’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기업 ‘지분’을 제공하고 일정한 형태의 ‘공동경영’을 실시하면, 대가로 국가가 기업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부분 해주고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Azzellini 2009, 185).⁷⁾

파브리카 아덴트로로는 2005년 말까지 15,000개의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이 금방 드러났다. 파브리카 아덴트로의 실행에서 노동자들의 지분은 사실은 사적 기업이 대부분 저렴하게 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었을 뿐이었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반면 노동자들은 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자본가’로서 ‘기업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였다(Fuentes 2011, 25, 32, 34-5).

차베스와 그의 정부는 파브리카 아덴트로 프로그램에 내재된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차베스는 파브리카 아덴트로를 발족하면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많이 “자본주의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3달 후에는 “자본이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는 자본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고 나

6) 인베팔(Invepal)과 인베발(Invebal)에서 공동경영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7) 파브리카 아덴트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또한 수익의 10-15%를 ‘산업 전환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여야 했고,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수용해야 했다(Azzellini 2009, 185).

머지를 착취하는 데 사용될 때의 자본 사용의 타락이다”라고 주장했다 (Fuentes 2011, 33).

볼리바리안 혁명 세력은 사적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게 일정한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한다면, 사적 기업들도 사회주의적인 기업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차베스도 사적 기업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생산 모델’인 집단적 소유 모델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베스와 볼리바리안 혁명 진영은 협동조합 육성 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브리카 아텐트로의 경우에도 집단적 소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다른 지분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즉 파브리카 아텐트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의 소유 형태는 사적인 소유와 집단적 소유의 혼합 형태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혼합적인 소유 형태의 기업들에서 노동자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사적인 소유자들을 대변하는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할 리도 없으며,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게 되어 이제 일종의 소자본가가 된 노동자들이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와 사회적 의무의 강제는 처음부터 형식적인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3. 사회적 생산 기업 모델

차베스는 2005년 7월 17일 또 다른 경제 모델로서 ‘사회적 생산기업(Social production enterprise: ESP)’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조직화된 노동계급 내에서 ‘경제주의적인’ 경향이 지배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공식적 경제로부터 배제된 이들’과 기업 주변의 ‘궁핍화된 공동체들에 거주하

는 이들'의 '필요를 고려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답을 이쉬트반 메사로스(István Mészáros)의 『자본을 넘어서 *Beyond Capital*』에서 발견했다고 한다(Fuentes 2011, 46).

메사로스는 사회주의에서 생산이 '공동체적 필요(communal needs)'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차베스는 메사로스의 논의로부터 '공동체적 소비(communal consumption)'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체적 생산(communal production)'을 하는 ESP 모델을 "21세기 사회주의에 조응하는 생산형태"로서 발견했다고 한다(Fuentes 2011, 46).

2005년 9월의 법령에 따르면, ESP는 "공동체와 그 주변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적어도 10%의 이윤을 위치한 공동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ESP는 "국가 소유, 집단적 소유 또는 혼합적 소유 중의 하나의 소유로 운영"되고, "노동의 내부 조직은 민주적인 모델을 따라야" 한다. 나아가 ESP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구매와 판매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Fuentes 2011, 46; Wilpert 2010, 138; Azzellini 2009, 174).

ESP에서 초점은 '소유 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맞춰졌기 때문에, 협동조합, 국유기업과 공동소유 기업뿐만 아니라 '사적 기업들도' ESP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적 기업도 의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특별 금융, 국가 구매와 국가로부터의 다른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Azzellini 2009, 174; Wilpert 2010, 138).

곧바로 '기초산업과 광업부', '경공업과 상업부', 그리고 '대중경제부'가 ESP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공동경영을 하던 기업들과 파브리카 아텐트로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모두 ESP로 전환되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2006년 중반에 이미 500개의 기업들이 ESP로 등록을 했고, 7,000여 개가 등록 중에 있었다(Wilpert 2010, 138).

그러나 ESP 모델이 고용 증대와 생산 회복에는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도, 새로운 생산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먼저 ESP의 '공

동체와의 통합과 (권한의) 공동체로의 권력 이양'은 없었고, ESP가 기부하는 이윤은 오히려 '추가적인 조세'에 가까웠다. 둘째 ESP의 성공은 '국가 기업들과의 계약'과 '유리한 정부 기금에 대한 접근', 그래서 결국 높은 유가에 기인했을 뿐이었다. 셋째 많은 '사적 기업가들과 국유기업 경영자들'은 '공동공영'을 "갈등을 피하고 일자리를 양산하며 생산을 증대"시키는 논리로만 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이해관계를 최대 소유자와 공유"하게 되면서 '기업 논리'에 빠지게 되었다. 여섯째 사적 자본들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ESP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산업가 동맹(Confederation of socialist industrialists)'이 생겨났다(Azzellini 2009, 175, 185-6; Fuentes 2011, 49-50; Lebowitz 2007, 51).⁸⁾

결국 ESP 모델은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물론 '공동체적 필요'를 위한 생산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2007년 중반까지 추가적인 ESP의 축진은 '중단'되었고, 이후에 "ESP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서술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으로 정의된 기준도 없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칭해가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한다(Fuentes 2011, 51).

ESP 모델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차베스와 차비스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들의 행위가 기업들의 소유형태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기업의 행위는 기업들의 소유형태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소유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통제가 없는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보수와 명성을, 자본가가 소유한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을,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1인당 소득을 극대화한다고들 한다. 국가가 세 유형의 기업들에

8) 차베스도 곧 ESP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그는 이미 2005년 11월 7일 더 많은 기계를 요구하는 오페다 내생적 제작기업(Fabrica Ojeda Endogenous Unit)에 대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는 발상에 잘못 익숙해졌다.....우리가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Fuentes 2011, 51).

계 특혜를 주는 대가로 사회적 의무를 강제하려 하면, 기업들은 실제로는 사회적 의무를 단지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ES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받게 될 특혜가 추가적인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ESP에 가입한다.

그러나 국유기업, 자본주의 기업과 집단적 소유 기업 모두 ESP가 되었다고 하여도, 자신들의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의 고유한 행동 양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각각은 이전과 다름없이 경영진의 소득과 명성, 이윤 및 1인당 소득을 극대화할 것이다. 공동체적 생산, 일정 비율의 이윤의 기부와 노동자들의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의무는 기업들이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불과하며, 사회적 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4. 사회적 재산 기업 모델과 코윈 국가

차베스는 2007년 1월에 다시 메사로스의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사회적 재산(social property)’,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필요’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하였고, ESP 모델을 ‘사회적 재산 기업(Social property enterprises: SPE)’ 모델로 대체하였다.

SPE 모델은 ESP 실험에서 나타난 차베스 정부의 ‘오류’에 대한 ‘자기비판’을 반영한 것인데(Lebowitz 2007, 46), ESP 모델에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집단적으로 기업을 공동 소유한 노동자들이었다면 SPE 모델에서는 중심적인 행위자가 ‘공동체들’로 설정되었다. 사실상 사회적 재산은 공동체가 소유한 재산이며, 사회적 생산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생산이고, 사회적 필요는 공동체의 필요를 의미한다.

실제로 리보위츠는 공동체위원회⁹⁾를 ‘21세기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세포’하

9) 차베스는 1999년 헌법에 명시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공동체위원회의 건설을 제안했다. 이후 2006년의 ‘공동체위원회 법’의 제정 이후에 2007년 5월까지 18,320개의 공동체위원회가 등록되었고, 2014년 8월에는 40,000만 개의 공동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공동체위원회는 또한 “민중들이 공동체적 필요를 민주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로서의 스스로가 [공동체적 필요]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회주의의 학교’이다(Lebowitz 2014, 8-9).

2008년 6월에 통과된 ‘대중경제 발전법(Law for the Development of Popular Economy)’의 제8조에서는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조직’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재산의 기업’으로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업”이고, 두 번째인 ‘간접적인 사회적 재산 기업’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국가가 운영”하지만 국가가 점차적으로 소유권을 “하나 이상의 공동체 집단에게 이전하게 될 생산단위”이다(Ullrich 2009).¹⁰⁾ 이후에 ‘직접적인’ SPE의 건설과 활동이 실제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먼저 2008년 말까지 ‘사회주의 공장’이 200개 이상 건설되었다. 사회주의 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장이 건설된 지역의 공동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고용될 수 있고, 사회주의 공장이 생산한 생산물은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민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Fuentes 2011, 51; Azzellini 2009, 188).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천 개의 ‘공동체적 사회적 재산 기업(enterprise of communal social property: EPSC)’이 건설되었다. EPSC는 “기업의 조직 구조와 기업이 포괄하는 노동자들과 이윤의 궁극적인 사용”을 코뮌이 결정하는 ‘코뮌의 집단적 재산’이다. EPSC는 대부분 공공 수송과 같은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식량 생산과 식량 가공에 종사하였다(Azzellini 2013, 29).

2010년부터는 새롭게 국유화된 공장들, 사회주의 공장들과 EPSC들과 공동체위원회의 공동 작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주택건설 거대 미션(Grand Misión Vivienda)’이 출범하였다. 이 미션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350,000개 이상의 주택이 세워졌는데, 주택 공급의 50% 정도가 공동체위원회

10)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회적 생산과 분배 기업’이고, 다섯 번째는 ‘자주관리 기업’, 여섯 번째는 ‘가족생산 단위’, 일곱 번째는 ‘대안적인 교환 그룹’, 마지막은 ‘공동체 물물교환자(Trueques)’이다.

자신들에 의해 지어졌다. 공동체위원회는 주택을 건설할 노동자들을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선발하는 등 공동체가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와 실행을 맡았다 (Fuentes 2011, 3; Ellner 2013, 2).

직접적인 SPE의 건설과 함께 베네수엘라에는 공동체위원회가 코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4년 8월까지 778개의 코뮌이 등록을 했고,¹¹⁾ 마두로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코뮌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2014년 초에는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코뮌거주자위원회(National Commune Council)’가 건설되었으며, 2014년 9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뮌발전은행(Communal Development Bank)’이 신설되었다.

5. 베네수엘라 경제모델의 발전과 직접적인 사회적 재산기업 모델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삼각형 이론은 한편으로 20세기 사회주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였고, 다른 한편 협동조합 건설과 공동경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볼리바리안 혁명의 실천에서 나타난 교훈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삼각형 이론은 소련 유형의 20세기 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명령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생산’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기업들과 베네수엘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 기업 모델에서 나타났던 ‘집단적 소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또한 이 이론은 배제되고 궁핍한 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름의 대안으로 ‘공동체적 소유’를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20세기 사회주의 이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삼각형 이론과 특히 직접적인 SEP 모델은 과도하게 공동체와 코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대의 대부분

11) 차베스는 2007년 1월의 취임연설에서 ‘부르주아 국가’를 대체할 ‘코뮌국가’의 건설을 선언했지만, 이후 코뮌 건설은 지지부진하였다. 이후 2010년에 ‘유기적 대중권력법’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공동체위원회가 ‘연합’하여 코뮌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2년 10월 20일에 차베스가 내각에 ‘자기비판’을 요구한 이후에야 코뮌 건설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Foster 2015, 2).

의 산업은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량과 주택 같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지역 내에서 전부 소비되는 일부의 생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산물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소비, 어떤 경우는 세계적인 소비를 위해서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왜 전국적인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적 필요'를 충족해야 하고, 왜 그러한 기업들을 사회 전체가 아니라 공동체나 코뮌이 소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기업들을 공동체나 코뮌이 소유하게 한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 의식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체위원회와 코뮌이 배타적으로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기를 원할 경우 유고슬라비아의 코뮌들이 보여주었던 지역주의의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와 코뮌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전국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초과이윤을 자신의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지역 내의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키려 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지역적인 집단적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지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러한 기업들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전국적인 코뮌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주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전국적인 코뮌이 기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 능력까지 갖추어야 하게 되며,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 전국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의 장소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코뮌들은 조세 수입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 자신들의 지역 내에 투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와 같이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정치적 공장'의 문제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에서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전국적인 코뮌들의 연합 조직이 확고해지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뮌들의 연합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경

제적인 효율성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문제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산되는 기업들은 노동자 자주관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 소유의 기업들로 운영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서 내는 이윤은 최대한 중앙정부의 투자 자금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경제 전체의 필요에 맞게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가장 생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 계획안이 결정되면, 중앙정부가 코뮌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코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정부는 투자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전국적인 코뮌에 엄격한 책임을 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째 직접적인 SPE는 대부분 공동체위원회와 코뮌이 새롭게 설립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SPE 건설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특히 석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가가 높았을 때에는 직접적인 SEP를 계속 건설할 수 있지만, 최근과 같이 유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SEP의 추가 건설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¹²⁾ 그래서 노동자 통제 운동을 새롭게 건설되는 공동체 기업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는 국유기업들에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여섯째 사회주의 기업들이 ‘공동체와 코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특히 국가 관료들과 국영기업 경영진들이 노동자 통제를 회피하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한 발상은 공동체와 코뮌이 설립하고 소유한 기업에서만 노동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많은 부처장들과 국유기업 경영자들이 공동경영에서 나타났던 집단적 소유 의식을 문제 삼으면서 노동자 통제를 방해해 왔다는 점을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2) 현재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 대비 4분의1토막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국가재정의 95%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의 재정수입은 지난 18개월간 60%가량 감소하였다.

IV.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의 전개 과정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통제 운동은 앞에서 살펴본 대안적 경제 모델의 발전 과정에 의해 규정을 받으면서도 대안적 경제 발전 모델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다. 이 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통제 운동들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운동들이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과제를 고찰한다.

1. 인베팔의 공동경영과 인베발의 공장평의회 모델

베네수엘라에서 최초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공동경영은 2001년 3월 피오 타마요(Pio Tamayo)라는 설탕공장에서 실시되었고, 2003년 3월과 4월에 각각 국영석유회사 PDVSA와 국영 전기 회사 카다페(Cadafé)에서 기업 이사회와 자문기관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노동 통제 운동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 선언을 한 직후 차베스 정부는 2005년 1월과 4월 노동자들이 점거 중이던 종이회사 베네팔(Venepal)과 밸브회사 CNV를 국유화하여 각각 공동경영 기업인 인베팔과 인베발로 재출범시켰다. 두 경우 모두 정부와 노동자 협동조합이 각각 기업 지분의 51%와 49%를 보유하였다. 사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정부 대표 2명과 노동자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차베스의 지시로 사장도 노동자 대표가 맡게 됨에 따라 두 경우 모두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조돈문 2012, 347).

이후에 인베팔과 인베발은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적 상징’이 되었다. 차베스는 인베팔의 경우를 “새로운 생산관계의 모델로 향하는 첫 단계”로 부르며, “내 운명은 (인베팔) 노동자들에게 맡겼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조돈문 2012, 338-9). 그렇지만 차베스가 극찬했던 인베팔의 경우에 공동경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인베발은 출범 당시 사장과 이사회 의 과반을 노동자들이 차지했지만, 곧 정부 측 이사회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독점한 반면 노동자 측 이사회는 노동자들

과의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2005년 11월 노동자 총회를 열어 노동자 대표 이사들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2006년 4월에는 인네팔의 사장을 산업통산부 장관이 검직하게 되었고, 노동자 대표 이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2명도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서 공동경영은 붕괴하였다(조돈문 2012, 338-9).

갈등은 이후에 계속 이어졌고, 2009년 2월에는 정부 측이 추가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시켜 정부 지분은 83%이고 노동자 지분은 17%가 되었다고 발표하게 된다. 또한 인베팔 이사회는 2009년에 공동경영을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반경영평의회로 전환시켰다(조돈문 2012, 341-2).

특히 인베팔 경영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베네수엘라에서의 공동경영 모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경영진은 공동경영을 하지 않고 있던 마라카이 공장에서 저임금의 계절노동자 161명을 고용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임시직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에 포함시켜야 하는 법률을 피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 120명의 계절노동자들을 해고했다(Azzellini 2009, 182-3).

반면 인베발의 경우 인베팔과 유사한 공공경영 모델에서 출발했지만, 인베팔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베발의 2명의 정부 측 이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결과 인베발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베발 노동자들은 2007년 1월 29일 공장평의회 건설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노동자 지분 49%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에 반납한다(조돈문 2012, 347-8).

이사회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인베발 노동자들은 “혁명을 노동자평의회 결성을 통해 심화시키자”는 차베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장평의회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Azzellini 2009, 184).

인베발의 공장평의회는 초기에는 37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14명으로 줄어들었다. 14명의 평의원에는 공동체위원회 2명과 군부대 대표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는 노동자 총회였고, 다음의 의사결정 순위를 공장평의회가 차지했다. 인베발에는 여전히 이사회는 존재하지만, 이사회는 법적으로만 인베발을 대표할 뿐이었다(조돈문 2012, 348-9).

인베발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차베스의 비판¹³⁾도 고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소유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베발 노동자인 훌리오 곤잘레스(Julio Gonzalez)가 지적했듯이, 인베발 노동자들은 “한 명의 자본가 대신에 60명의 자본가를 가지기 위해서 한 명의 자본가를 걷어차지 않았다”(Azzellini 2009, 184).

2. 알카사의 노동자평의회 모델

2005년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실험은 약 3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국유 알루미늄 기업 알카사(Alcasa)에서 이루어졌다. 차베스가 신설한 ‘기초산업과 광업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빅토르 알바레스(Victor Álvarez)가 2005년 2월 카를로스 란즈(Carlos Lanz)를 알카사의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에 알카사에서 노동자들의 지분 참여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자 통제 모델이 만들어졌다(Azzellini 2009, 179).

알카사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평의회 모델과 유사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총회에서 소환가능하고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부서장들을 선출하였고, 노동자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란즈를 제외한 7명의 기업 집행위원 중 3명은 과나야 산업단지 출신, 2명은 알카사 노동자, 나머지 2명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말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이사회를 대체할 ‘노동자평의회’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했던 단체교섭이 법원과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Azzellini 2009, 179-80).

13) 차베스는 2007년 1월 인베팔과 인베발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과오였다는 점을 인정했다(조돈문 2012, 347).

그러나 또 하나의 모범으로 평가되었던 알카사에서 이후에 노동자 통제 운동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2006년 초까지 노동자 모임은 훨씬 덜 자주 열렸고, 일부 부서에서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노동조합 선거에서 공동경영을 지지한 후보가 6%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반면, 배타적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노동자들이 투표에서 이전의 체계로 복귀하는 데 찬성하게 되었고, 이후의 선거에서 이전의 관리자들이 선출되어 복귀하게 되었다(Fuentes 2011, 41).

특히 알카사에서 노동자 통제 운동이 급격하게 퇴조된 것은 ‘전략산업’에서의 노동자 통제를 반대하는 국가 관료들의 ‘현실주의’가 수용되어 2007년 5월 란즈가 알카사 사장에서 해임된 이후이다. 새로 임명된 사장이 공공경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노동자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교체되지 않고 있던 이전의 이사들과 경영진들은 과거의 부패한 관행으로 되돌아갔다(Ellner 2010b, 68; Azzellini 2009, 180).

3. 시도르에서의 노동자 통제 투쟁

2006년 12월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재선된 이후에는 국유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특히 2008년 5월에는 노동자 통제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1년 이상 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이후에 아르헨티나 다국적기업 테친(Techin)이 소유한 철강회사 시도르(Sidor)가 다시 국유화된 것이다.

시도르에서는 1997년 민영화 이후 직접 고용 노동자의 수는 11,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하였고, 하청 계약 노동자는 9,000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초 단체협상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는 9,000명의 임시계약 노동자들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노동자들과의 새로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1,500명의 노동자들이 거의 두 달 동안 파업을 하면서 국유화를 요구하였다(Robertson 2012, 4).

았다(김창근 2010, 170).

PGS는 관료주의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생산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경영진 선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위원회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노동자평의회 건설, 기업의 재무 장부 공개 등을 제안하였다. 차베스는 PGS를 제출받으면서 기초산업의 국유기업이 ‘사회주의 기업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자신의 정부가 PGS의 권고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차베스는 2010년 5월에는 알카사의 싸자고(Elio Sayago)와 시도르의 드올리베리아(Carlos d’Oliveria)를 포함해서 8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자 사장들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차베스의 노동자 통제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기대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미 2009년부터 PGS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CVG의 경영진들은 CVG 기업들을 두 개의 큰 기업으로 합병하려는 PGS를 무시하고 2010년 예산을 개별 기업별로 작성하였다. 또한 ‘기초산업과 광업부’와 CVG, 그리고 CVG 내의 철강 조직 같은 국가 기구들이 PGS의 실행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저항 세력의 핵심적인 인물로는 볼리바르 주지사이자 전 CVG 사장이었던 랑헬이 지목되었다. 랑헬은 국가 관료들뿐만 아니라 친-차베스 노동조직인 ‘볼리바리안 노동자 힘(Bolivarian Workers Force, FBT)’ 내의 관료주의 세력과 비공식적 연합을 맺고 PGS를 약화시키려 했다(Robertson 2012, 6, 9).

또한 2011년 10월 시도르의 노동조합 선거에 부통령 하우아(Elias Jaua)와 노동부 장관 이글레시아(Maria Cristine Iglesias) 같은 정부 인사들이 PGS에 덜 열성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은 샀다. 게다가 FBT가 2011년 1월과 2월의 34일 동안 알카사 공장을 폐쇄하는 사태를 벌이기도 하였다(Robertson 2012, 9-10; Martin 2011, 2).

마침내 2012년에는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부통령 하우아는 2012년 2월 25일 싸자고가 알카스의 사장에서 해임되었으며 2011년 공장 폐쇄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마르카노(Angel Marcano)가 사장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시도르의 드올리베리아도 사장에서 해임되었고, 대신 FBT의 일원이며 주시사 랑엘의 협력자인 CVG의 사장 베리오스(Rafael Gil Barrios)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 시도르 노동자를 공격했던 전 노동부 장관이었고 당시에는 볼리바르 주의 대변인이었던 리베로는 싸자고의 해임이 당시 쿠바에서 암 치료 중이었던 차베스의 승인을 받았으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알카사 노동자들은 싸자고의 해임이 노동자 통제에 저항하는 ‘국가 쿠데타’라고 격하게 반응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싸자고가 해고된 이유는 알카사가 다국적기업들에게 더 많은 알루미늄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Robertson 2012, 10-1).

V.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집단적 소유와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1. 공동경영과 집단적 소유 의식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 모델은 사회적 경제 모델에서부터 시작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하여 출발하였다.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공동경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 의식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로 집단적 소유 의식의 문제가 얼마만큼 베네수엘라 노동자 통제 운동의 중심적인 문제이었던가는 실증이 필요한 문제이다.

인베팔과 같은 공동경영 기업의 노동자들은 국가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의 관료주의가 공동경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 관료들과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 의식을 비난하였다. 예로 인베팔에

서의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던 하우아는 문제는 ‘잘못된 사람 선발’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의 부재’라고 주장하였다(Fuentes 2011, 36).

이러한 관료들과 경영진들의 인식은 차베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는 2007년 초에 인베팔에서 “우리는 일부의 지분이 국가에 의해, 다른 부분은 노동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재산 체제를 확립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적시에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노동자들, 자본주의 협동조합과 연합한 자본주의 국가로 끝날 것”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재산’ 기업을 촉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Fuentes 2011, 34).

확실히 인베팔과 같은 사례의 경험들은 ‘전략적인’ 국유기업에서는 노동자 통제 운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베스의 일관된 주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¹⁵⁾ 게다가 그러한 경험들은 또한 공동체와 코민이 소유하고 통제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노동자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차베스가 생각하게 하는데 기여했으며, 차베스의 사회주의 삼각형과 사회적 재산 모델의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베팔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노동자들이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와 같이 집단적 소유 의식을 보였다든 것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유는 인베팔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진 노동자들의 경우에 보여 주는 행동양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인베팔 노동자들이 인베팔의 출범 때부터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져 있었다면,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노동자들과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생산 모델 기업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에의 참여를 포기하고 경영을 전문적인 경

15)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처음에 ‘공동경영’이라는 용어를 ‘21세기 사회주의’ 건설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2005년 메이데이의 구호도 “Cogestión es revolución(공동경영은 혁명이다)”이었다. 그러나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공동경영은 중지되었다. 나아가 차베스는 2006년 초 PDVSA와 같은 전략적 부문들에서의 공동경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Fuentes 2011, 5-6, 15).

영진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전문 경영진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때, 소자본가들로서 자신들의 소득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베팔 노동자들은 국가 관료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려 할 때부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둘째 인베팔에서 갈등이 기업 이윤의 분배와 노동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생겨났던 점도 인베팔 노동자들이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졌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진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의 참여에는 무관심하여, 대신 개인 소득과 노동조건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베팔 노동자들은 참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측 이사들의 의사결정 독점에 반대하여 기업 경영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셋째 인베팔 노동자들이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지지 않았었다는 점은 계절 노동자들의 해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사장 빠야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상공부와 다른 국가기관들은 협동조합의 빠야 해임 결정을 거부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해임 요구를 관철시켰다(Azzellini 2009, 182). 빠야와 경영진의 계절노동자 고용과 해고는 분명히 기업의 이윤을 높였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노동자들이 집단적 소유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빠야를 해고하는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인베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노동자들이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내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노동자들이 집단적 소유 의식에 빠져 있었다면, 경영에 대한 참여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지분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타협안에 동의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베팔 노동자들은 타협을 거부했는데, 이유는 지분이 49%인 상황에서도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지분이 축소되면 참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조돈문, 2012, 341).

다섯째 집단적 소유 의식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소유 기업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집단적 소유 의식은 기업의 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흑자를 사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베팔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고, 또한 유고슬라비아의 적자 자주관리 기업의 경우처럼 베네수엘라 정부가 적자를 신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베팔의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소유 의식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향후에 인베팔의 이윤이 크게 확대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공동소유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소유 의식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베팔의 경우에는 아직도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이 소유에 대한 열망보다 대체로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인베팔의 경우에 공동경영이 붕괴되었던 핵심적인 이유기 처음부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려 했던 국가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들의 관료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판단이 옳다는 것은 인베팔의 경우를 처음부터 관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던 인베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인베발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더 높은 정치의식 수준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베발에서도 국가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려 시도했다면, 아마 유사한 형태의 갈등과 충돌이 인베발에서도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그러했다면 인베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49%의 기업 지분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매우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2. 내생적 우파의 등장과 노동자 통제 운동

베네수엘라에서 특히 노동자 통제 운동에 반대하는 차비스모 세력은 '내생

적 우파(*la derecha endógena*)’라고 불리운다. 내생적 우파의 핵심은 정부 관료들인데, 그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특권과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다.¹⁶⁾ 다음으로 국영기업 경영진은 기업 내에서의 권력을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관료들과 경영진과 결탁한 노동운동 내의 친-차베스 ‘노동귀족들’과 차베스 정부와 협력하면서 성장해 온 자본가 집단인 ‘볼리-부르주아(*Bolibourgeoisie*)’와 원자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료들과 경영자들을 매수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포함된다.

CVG에서 내생적 우파의 조직적 저항이 더욱 강력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이유는 과나야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이다. 그래서 PGS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형성되어 되었고, 반대 세력의 중심은 볼리바르주 주지사 랑헬과 전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고 CVG의 경영자들을 포괄하는 관료들이었다. 여기에 ‘차비스타’ 노동운동 조직 FSBT(*Bolivarian Socialist Workers' Front*)¹⁷⁾가 생산을 사보타지하고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동대원들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생적 우파’의 지원 세력에는 다국적기업들이 포함되는데, PSG가 다국적 기업들에게 베네수엘라 경제에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였고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축소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Robertson 2012, 10).

자생적 우파가 PGS를 반대하는 이유는 PGS의 실행은 기업에서 ‘노조의 통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들의 권력, 특권과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을 노동자들에게 내주는 것이며, 특권과 이권과 권한이 ‘더 참여적인 형태의 경영진’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노동자 통제에

16) 차베스 정부 내에서 노동자 통제에 적극적인 인사는 차베스 ‘거의 유일’하며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과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거의 모두 ‘적대적’이거나 ‘소극적’이라는 평가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조돈문 2012, 358).

17) FSBT는 친-차베스 노동운동 조직 CBST(*Central Bolivariana Socialista de Trabajadores y Trabajadoras de la Ciudad, el Campo y el Mar*)의 한 분파인데, CBST의 다수는 노동자평의회가 노동조합과 경쟁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노동자평의회에 반대하고, PDVSA 등의 전략산업에서의 노동자 통제에도 반대해 왔다. 더 자세한 것은 조돈문(2010)과 Ellner(2013)를 참조하라.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 통제가 “개인적인 이익과 정치적 기회주의 때문에 차베스를 지지한” 세력의 ‘특수한 이해관계’들이 위협받기 때문이며, 노동자 통제의 실행으로 ‘위계’가 제거되고 기업이 참여적인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가 관리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Robertson 2012, 10, 12).

엘너는 내생적 우파를 ‘중간계급 관료들’ 또는 차비스모 내의 ‘온건파’라고 부른다. 그는 흥미롭게도 온건파가 계급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내생적 우파는 ‘중간 부문’ 또는 중간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며, ‘군부’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Ellner 2013, 25, 75).

여기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통제 운동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바로 운동의 결과로서 새로운 특권층이 등장하여 관료주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제는 혁명적 운동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새로운 특권층은 기업장과 전문직들이 중심이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가 관료들과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 우파이다. 자생적 우파는 차베스를 지지하는 차비스모를 자처하면서 볼리바리안 혁명 덕분에 새롭게 특권층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되었다.

VI.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은 많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들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차비스모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질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볼리바리안 혁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볼리바리안 혁명이 이룩한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통제 운동의 경험은 여전히 살

아남아 있고, 도시 빈민들에게 공동체위원회와 코뮌의 경험이 계속 기억될 것이다.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한,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 통제와 코뮌 운동이 쉽게 소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차비스모들은 이번의 위기가 자신들의 21세기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를 바란다.

이 글은 베네수엘라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자 통제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과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는 볼리바리안 운동 진영이 자신들의 운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상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볼리바리안 운동 스스로가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정구(1990), 「벼랑에 선 페레스트로이카-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 『경제와 사회』, 5권.
- 김창근(2007a),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7b),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김수행 등,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0),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 7, No. 3.
- 이정우(1995),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모형」,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참여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하여』, 조우현 엮음, 창작과비평사.
- 조돈문(2010), 「노동정치: 베네수엘라의 좌파정권과 노동조합운동의 딜레마」,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Vol. 16, No. 2.
- _____ (2012),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실천: 인베팔(Invepal)과 인베발(Inveval) 실험의 비교 연구」, 경제와 사회, 95.
- Azzellini, Dario(2009), “Venezuela’s Solidarity Economy: Collective Ownership, Expropriation, and Workers Self-Management”, *The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 22, June 2009.
- _____(2013), “The Communal State: Communal Councils, Communes, and Workplace Democracy”,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6, No. 2.
- Djkordjevic(196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Social Property”, *Socialist Thought and Practices*, 24.
- Ellner, Steve(2010a), “Hugo Chavez’s First Decade in Office: Breakthroughs and Shortcoming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7, No. 1.
- _____(2010b), “The Perennial Debate over Socialist Goals Played Out in Venezuela”, *Science & Society*, Vol. 74, No. 1.
- _____(2013), “Social and Political Diversity and the Democratic Road to Change in Venezue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May 2013; Vol 40, No. 3.
- Fischer-Hoffman, Cory(2014), “Maduro Announces the Creation of the Communal Development Bank”, *Venezuelanalysis*, Sep 17, 2014.
- Flakierski, Henryk(1989), *The Economic System & Income Distribution in Yugoslavia*, M.E. Sharpe, Inc.
- Foster, John Bellamy(2015), “Chávez and the Communal State: On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 Venezuela”, *Monthly Review*, Vol. 66, No. 11 (<http://monthlyreview.org/2015/04/01/chavez-and-the-communal-state/>).
- Fuentes, Federico(2011), “Cogestión es Revolución: Worker participation during the first Chávez administration(1999-2006)”,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an Arts Degree, School of Soci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Gapinski, James(1993), *The Economic Structure and Failure of Yugoslavia*, Praeger.
- Horvat, Branko(1969), 『자주관리제도: 유고 사회체제 연구』, 강신준 옮김, 풀빛.
- _____(1971), “Yugoslav Economic Policy in the Post-War Period: Problems, Ideas, Institutional Developmen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1, No. 2.
- Lebowitz, Michael(2007), “Venezuela: A Good Example of the Bad Left of Latin America”, *Monthly Review*, July-August 2007.
- _____(2008a), “The Only Road Is Practice: After the Venezuela Referendum Defeat”, *Monthly Review*, June 2008.
- _____(2008b), “The Path to Human Development: Capitalism or Socialism?”, *Monthly*

- Review*, February 2008.
- _____(2014), “Proposing a Path to Socialism: Two Papers for Hugo Chávez”, *Monthly Review*, Vol 65, No. 10(<http://monthlyreview.org/2014/03/01/proposing-path-socialism-two-papers-hugo-chavez/>).
- Malacic, Janez(1979), “Unemployment in Yugoslavia From 1952 to 1975”, *Eastern European Economics*, Summer 1979.
- Marković, Goran(2011), “Workers’ Councils in Yugoslavia: Successes and Failures”, *Socialism and Democracy*, Vol. 25, No. 3.
- Martin, Jorge(2011), “Venezuela & Revolutionary Vignettes, Part 1: Workers’ Control vs Bureaucrats, Mafia and Multinations in Bolivar”, *In Defence of Marxism*, July 10th 2011.
- Mészáros, István, 1995, *Beyond Capital*, Merlin Press.
- Nakatani, Paulo and Rémy Herrera(2008), “Structural Changes and Planning of the Economy in Revolutionary Venezuel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0, No. 3.
- Nove, Alec(1991),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Revisited』, 대안체제 연구회 옮김, 백의.
- Pineiro Hanecker, Camila(2009), “Main Challenges for Cooperatives in Venezuela”, *Critical Sociology*, Vol. 35, No. 6.
- Robertson, Ewan(2012), “Revolutionary Democracy in the Economy? Venezuela’s Worker Control Movement and the Plan Socialist Guayana”, *Venezuelanalysis*, No. 7151, August 2012.
- Seibel, Hans Dieter and Ukandi G. Damachi(1982), *Self-Management in Yugoslavia and the Developing World*, St. Martin Press.
- Sirc, Ljubo(1979), *The Yugoslav Economy Under Self-Management*, The Macmillan Press Inc.
- Supek, Rudi(1975), “The Sociology of Workers’ Self-management”, in Branko Horbat et.al, *Self Governing Socialism*, New York, Int’l Arts & Sciences.
- Ullrich, Jan(2009), “The Development of Venezuela’s Popular Economy, Part I”,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4458>.
- Wilpert, Gregoey(2007), “Chavez’s Venezuela and 21st Century Socialism”,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Vol. 24.
- _____(2010), “Venezuela’s Oil-Based Development in the Chavez Era”, in Richard

Westra(ed.), *Confronting Global Neoliberalism: Third World Resist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Clarity Press.

김 창근

연세대학교
changkn1960@naver.com

논문투고일: 2016년 3월 23일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12일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Workers' Control and Communal Movement in Venezuela: The Lessons from the Yugoslavic Experiences

Changkeun Kim

Yonsei University

Kim, Changkeun(2016),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Workers' Control and Communal Movement in Venezuela: The Lessons from the Yugoslavic Experience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1), 37-72.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workers' control and communal council and commune movement in Venezuela, based on the lessons that we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the workers self-management and commune movement in Yugoslavia. The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he central problems in the Yugoslav movements are the problems of collective ownership and of emergence of new privileged class; 2) The alternative economic models had to be revised several times because of the problem of collective ownership, but they are not satisfactory. 3) In the workers' control movement in Venezuela the problem of collective ownership has not been serious, but rather the most serious obstacle that the movement should overcome is the problem of bureaucratism which has have the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mergence of new privileged class.

Key words Alternative Economic Model, Bolivarian Revolution, Chavez, Collective Ownership, Communal Council, Privileged Class, Venezuela, Workers' Control, Worker's Self-Management, Yugoslavia